

대통령 기자 간담회 [이라크 파병 문제]

▲문 :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진행상황은.

▲답 : 국제적인 명분, 국익,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고려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면밀히 조사를 하고 의견을 정할 수 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파병을 하기로 만일에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6자 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열렸다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다, 미사일을 어떻게 한다, 이런 강공을 하고 나왔을 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격히 위기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당선자 시절에 있었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국정책임자의 판단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탐색하는 게 필요하다.

▲ 문 :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가.

▲ 답 : 그렇지 않다.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해 보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점검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그런 위험한 징후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낙관만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나. 어제 북한이 플루토늄 용도에 관한 일종의 폭탄 선언 같은 것을 하지 않았나. 미국도 한국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해석해 상

황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과민하게 반응하면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라크에 조사하러 간 사람들도 오늘 돌아온다. UN 결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결론은 안 바뀔 수 있다 할지라도 의미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유엔 결의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결정의 앞이나 뒤냐 하는데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그것도 살펴봐야 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상황들은 많다.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문제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정부의 태도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일체 삼가라고 했다. 그 뒤에 정부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은 발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다. 이 문제를 놓고 파병문제와는 별개로 국정운영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선 어떤 대외정책의 문제를 놓고 강은파가 각기 여러 가지 자기 의견들을 얘기한다. 그럴 때 대개 언론이나 국민들은 최종적인 결정은 부시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는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의 국민적 인식은 좀 다르다. 옛날에 모든 것을 일사분란하게 은밀히 유력자 몇몇 사람들이 중요한 국가정책들을 결정해 버리는 방식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각료들 사이에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 무기력이나 혼란, 또는 혼선으로 비친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허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식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항상 밀실에서 유력자 몇 사람이서 결정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과 미래의 지향 속에 갈등이 있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솔직히 이 얘기를 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옛날식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 한편 여러분의 다소 조심스런 의견개진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견 수렴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냥 나무랄 수 없다.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 저는 미래의 질서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를 제가 봉쇄할 만한 명분이 없다. 다만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란다

▲ 문 : 파병하고 북핵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한반도 안정이나 평화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상황이 안 오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답 : 어느 쪽도 연계하고 있지 않다. 경제적인 이익 부분도 이 문제와 연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배치 문제는 한참 후의 일이고 파병기간과 겹쳐지는 문제가 아니다. 재배치 문제는 한미간에 새로운 안보상황에 따라 새롭게 처리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차제에 또 우리 한국군도 자주국방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맞추어 나가서 정리해 나갈 문제이지 파병문제와 결부시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핵문제도 그것을 묵시든, 명시든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 문 : 지난 호남민심 관련 발언의 전후 사정은.

▲ 답 :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대단히 왜곡된 것이고, 실제로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에게 100점을 요구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통령은 선택된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호남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가지고 있겠지만 제일 나쁜 경우라도 지난번에 이회창 후보가 되느냐 노무현

후보가 되느냐의 선택을 놓고 저를 선택한 것 아니냐. 그 수준으로 기대를 하라는 그런 뜻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호남에서 너무 높은 요구를 하지 말고, 그래도 노무현이 낫다는 수준으로 생각해 달라. 그 결론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들어갔다.

▲ 문 : 송두율 교수문제에 대해서는.

▲ 답 : 입국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초청문제가 나왔을 때는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처리하라고 얘기했다. 그 이유는 범죄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거나 혐의가 확정돼서 처벌을 받거나 그것은 그것이고, 따로 다른 의미가 있어서 초청되면 그것은 별개문제라는 생각으로 관여하지 않았는데 실무선에서 알아서 초청 안 했다. 최병렬 대표가 말하는 것은 쪽 길게 설명한 부분 가운데 한 토막이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해외민주인사들을 초청하고 싶어 했고, 청와대에 초청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했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논의됐을 때 우리도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다 초청됐으면 싶었는데 실무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처리했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초청하고 싶었는데라는 부분만 빼서 얘기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어렵고 무리이다. 지금까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 그때 질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들어오고 싶으면 한국의 국법에 의해서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해 왔고 그렇게 생각했다. 다만, 어떤 결정에 영향 끼친 것과 관계없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의외이다. 그것이 또 이념공세의 빌미가 되니까 좀 불편하다. 이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적인 공방거리로 그렇게 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송두율 교수 같은 사람이나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라는 체제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아주 원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 문 : 정부의 재벌정책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지.

▲ 답 : 수사문제와 재벌정책을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누구 수사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점은 신뢰해 달라. 설사 검찰이 잘못 판단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책임 있게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성숙해 가도록 해야지, 정권이 일일이 그것을 다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말 우리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 문 : 최낙정 장관을 14일 만에 경질했는데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답 :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인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실수를 연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검증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나. 과거에 해수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런 큰 실수가 없었다. 해수부의 중견공무원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다. 해수부쪽이 전문분야가 많이 있어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아쉽다.

▲ 문 : 각료들이 총선 출마를 희망할 경우 일정한 시기에 개각을 검토할 수 있는지. 민주당적 정리와 관련, 정기국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답 : 아직 장관들에게 출마나 정치를 권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희망을 말해 오지도 않았다. 따라서 현재는 아무 계획도 없다. 탈당문제는 있는 게 부자연스럽지만 결행하기도 쉽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나가라고 자꾸 재촉하고 그게 시비거리가 돼서 결정한 것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

다만 민주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당이 갈라져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대통령들은 정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기 편하도록 정계를 개편해 왔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당정분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직간접의 어떤 장치도 당직임명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직간접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당을 깨든지 못 깨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이 정당 구조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시장이 붕괴할 때는 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만한 정치인이 정당이 붕괴될 때 꼭 막아야 한다면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정치구도가 말하자면 지역주의, 지역분할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와해되는 것을 막을 만한 이유가 없다.

전체적으로 이 정치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치판 가지고 한국정치의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2만 달러 시대로 못간다. 그러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정치구도 재편에 권력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 문 :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의 국회나 정당과의 관계는.

▲ 답 : 국회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법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이다. 대통령이 당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있겠나. 저도 노력하겠다.

▲ 문 : 송두율 교수와 관련해서, 원숙한 처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처리해야 하는지.

▲ 답 : 모든 것을 대통령이 결정해서 모든 문제에 관해 질문 받는 그런 시대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한 번 흔들어 보려고 공격을 해대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겠나. 모든 상식적인 의견도 다 흠을 잡아서 공격을 하면 다 공격거리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 여론형성의 매커니즘이 전혀 없다면 또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관계 당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에 영향을 줄만한 사회적 매커니즘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문 :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 답 : 집값은 안 오른다.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와 함께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고 집값이 폭등하면 거품이 들어갔다가 거품 빠지면서 또 다시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다.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켜야

한다. 또 주거비라는 것은 서민들의 삶 자체이다. 민생안정 그 자체이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일반적 수요공급과 관계없이 강남 부동산이 부동산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은 강남 부동산가격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크게 보아서 장기적으로 투기적 수요를 막아버리면 강남 부동산이 전국 부동산을 흔들지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이라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다.

▲ 문 :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서 한 얘기는.

▲ 답 :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다. 자꾸 분배냐 성장이나 이런 논쟁이 있어서 내가 분배를 포기한 일이 없다, 그런데 2만 달러 얘기를 하니 자꾸 성장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분배는 일자리다.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자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무시하고 분배를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다.